

# 지배구조·기업문화 개선... 非은행·非이자 중심 사업 재편

경영성·역량·자격요건 등 검증 외부 자문기관 평판 조회 진행 일치된 의견으로 최종 후보 선정

김지완 BNK금융그룹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 단독후보로 확정됨에 따라 사실상 연임이 확정됐다.

BNK금융그룹은 6일 오후 2시 이사회를 열고 김지완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후보자는 오는 3월 차기 회장으로 공식 선임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임이 확정된 셈이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내달 열리는 정기주주총회 의결을 거치면 3년 간 연임하게 된다.



김지완 BNK금융그룹 회장

김 회장은 BNK금융이 자사 주가 시세 조작과 채용 비리 등으로 한창 시끄러웠던 2017년 9월 회장에 취임한 후 그룹 지배구조와 기업문화 개선에 힘쓰면서 조직을 안정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비은행·비이자 중심으로 금융그룹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조직 내 인재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임원추천위원회로부터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다.

임추위는 “김 후보의 경영 성과를 통해 경영능력을 검증했으며, 조직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금융 그룹의 중장기 경영계획인 ‘GROW 2023’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현 대표이사 회장의 연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BNK금융은 지난달 22일 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날 BNK금융은 후보 추천 원칙과 후보군 확정, 향후 절차 및

정등을 논의한 후 같은 날 서류 심사 평가를 통해 1차 후보군 5명을 선정했다. 이후 지난달 31일 최고경영자 1차 후보군 5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2월 4일 프리젠테이션 평가 및 2월 6일 면접 평가를 통해 경영성과와 역량, 자격요건 적합 여부 등 종합적인 검증 뿐만 아니라 외부 자문기관의 평판 조회 결과까지 고려하여 김지완 회장을 일치된 의견으로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

한편 BNK금융그룹의 올해 키워드는 ‘개방’과 ‘협력’이다. 금융산업의 틀이 바뀌는 디지털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선 소비자와의 소통을 통해 변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소비자와의 소통을 바톤 삼아 각 계열사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포석

이다.

김지완 BNK금융그룹 회장은 새해 신년사에서 “오픈뱅킹 등으로 금융업의 경계가 무너지는 시대에 고객중심의 개방형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귀를 기울여 잘 들으면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이청득심(以聽得心)’의 마음으로 영업프로세스 전반을 개선해 BNK금융만의 새로운 시대를 열자”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은행부문을 살펴보면 그룹 이자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CIB(기업투자금융), WM(자산관리)부문의 비이자수익도 크게 증가했다”며 “금융업의 경계가 무너지는 시기에 소비자와의 눈높이에 맞춘 혁신상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산업부, 3세대 전기구동차 육성사업 공고 6년간 3856억 투입... “車부품 산업 체질개선”

올해 1차 연도사업 24개 과제 지원

정부가 친환경차 핵심부품을 개발하는데 6년간 3856억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차 핵심부품 개발을 지원하는 ‘시장자립형 3세대 전기구동차(xEV) 산업 육성사업’을 공고한다고 6일 밝혔다.

xEV사업은 친환경차 대중화 시대를 조기에 열기 위해 시장경쟁력을 갖는 소비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xEV 핵심부품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국비 2천740억원을 포함해 총 3천856억원을

중소·중견 자동차부품 기업에 지원한다.

올해는 1차연도 사업으로 지정공모형 24개 과제(390억원)를 우선 지원하고 2021년 이후 차례로 47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고 기간은 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월 중 선정과정을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산업부는 “대내외적으로 침체한 자동차 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의 체질 개선을 지원해 미래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한용수 기자

## “경제자유구역 內 소·부·장 투자 유치 확대”

(소재·부품·장비)

### 산업부 투자유치협의회 개최

#### 바이오제약 등 신성장 기업 유치 SI 관련 클러스터 조성 지역 협업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신산업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유치 활동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 코트라(KOTRA), 소재부품 투자기관협의회 등과 6일 서울 서초구 코트라 본사에서 올해 첫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외국인투자 유치도 4차산업혁명 기술이나 신산업 분야 등 경자유역의 고도화와 활성화를 견인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강화해야 한

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일본 수출규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신종코로나)으로 중요성이 부각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투자 유치를 확대한다.

특히 전방산업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해당 기업의 가치사슬에 맞는 수요연계형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유치할 방침이다.

산업의 고도화에 기여하는 기술보유 기업과 바이오제약 등 신성장 산업군 관련 기업의 유치 활동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직접 공장을 짓는 그린필드 투자보다는 인수합병(M&A) 투자를 늘리는 추세에 부응해 유망한 벤처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간 재무적 투자를 유도한다.

바이오제약, 우주·항공 분야 등 제조 과정에서 인종이 필요한 산업군이 있는 지역에는 임상시험전문기관, 국제인증 전문기관을 유치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향후 AI 관련 클러스터를 조성해 관련 산업육성을 진행 중인 지역 등과의 협업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거나 투자의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는 투자 유치 전담반을 구성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7개 경자유역청은 청별 투자유치 전략을 공유하고 중점 업종 분야의 타깃 기업을 발굴해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한용수 기자 hys@

## 조사단-회사간 분석결과 크게 차이나

>> 1면 ‘진화 안 되는 ESS논란...’서 계속

이밖에 지락차단장치의 미동작·음극 활물질 돌기 형성·기준치보다 높은 절연저항 값 등을 배터리 이상 추정의 배경으로 꼽았다.

이에 LG화학은 배터리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이유로는 지난 4개월 간 실제 사이트를 운영하며 가혹한 환경에서 실시한 자체 실증시험에서 화재가 재현되지 않았고, 조사단에서 발견한 양극 파편·리튬 석출물·음극 활물질 돌기·용융 흔적 등은 일반적인 현상일 뿐, 실험을 통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2차 조사위는 강원 평창 화재에 대해 “충전 시 상한 전압과 방전 시 하한 전압의 범위가 넘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유사 사이트 운영 기록의 배터리를 분석해 양극판 내부손상과 함께 구리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또한 경남 김해 건은 “배터리들 간 전압 편차가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고 유사 사이트 운영 기록의 배터리를 분석해 양극판 접합 현상과 갈변·황색반점, 구리 및 나트륨 결



문이연(오른쪽), 김재철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 조사단장이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지난해 8월 이후 발생한 5건의 ESS 화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삼성SDI는 조사 결과와 당사 분석에 큰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먼저 조사단이 발표한 배터리는 화재 현상이 아닌 다른 현상의 배터리이며 큰 전압편차는 충전율이 낮은 상태의 데이터로, 이는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의 차이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강원 평창의 경우, 조사단이 제시한 운영데이터는 화재 발생 3개월 전 데이터라 잘못 해석한 것으로 추정되고 당시 배터리 보호장치는 정상 작동했다고 설명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 키코에 집중하느라 DLF 감독 실패 지적도

>> 1면 ‘금감원 관치 역풍...’서 계속

정부가 이같은 문제를 인식해, 내부 통제 소홀로 다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임원을 제재할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경영진 중징계를 강행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여기에 금감원 등 금융당국이 책임을 지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금감원은 DLF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던 기회가 다수 있었다. 금감원은 지난 2018년 10월 파생상품 판매 실태 등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암행 감사)에 나서 우리·하나은행의 문제점을 인식했다. 그러나 형식적인 개선을 통보하는 데 그쳐 DLF 사태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 ◆ 행장 후보추천도 논란

손 회장이 ‘문책경고’를 받으면서 차기 우리은행행장 선출 일정이 잠정 연기된 가운데 행장 후보추천은 낙하산 논

란에 휘말렸다.

당초 우리금융임추위는 차기 우리은행 행장 최종후보 3인으로 김정기 우리은행 영업지원부부장, 이동연 우리 FIS 대표, 권광석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 등을 선정해 지난달 29일 최종 후보 1인을 뽑을 예정이었다. 세 후보들 가운데 김 부부장이 가장 유력한 차기 행장 후보로 대두됐다. 한일은행 출신인 손 회장의 뒤를 이을 상업은행 출신 내부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임추위는 차기 은행장 추천을 하지 못했다. 이를 놓고 청와대 실세의 지원을 받는 권 대표를 밀어주려는 IMM PE측 사외이사와 김정기 부문장을 추천하려는 손 회장 간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말이 나돌았다. 금융당국의 ‘관치 논란’이 점화된 건 그래서다.

한편 우리은행은 DLF부터 키코(KI KO)사태까지 금감원의 모든 조정안을 받아들였음에도 아무런 실익을 챙기지 못한 꼴이 됐다.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

했을 때 어떤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배상에 나설지 의문이라는 소리가 나온다.

우리은행은 지난주 키코 사태와 관련해 이사회를 열고 피해기업인 재영솔루텍·일성하이스코 두 곳에 42억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오는 7일인 키코 배상 여부 결정 시한을 한차례 더 연기해 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다. 키코의 경우 다른 피해기업과의 자율조정 가능성을 고려하면 배상금액이 훨씬 불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금융당국의 모든 조정안을 받아들였지만 고스란히 부담만 안게 됐다”며 “적절한 유인책이 없다면 향후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금융사의 적극적인 배상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은 오는 7일 정기이사회에서 향후 그룹 지배구조 문제 등을 포함한 일반적인 사항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